

# 조선후기 정치·경제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김 강 식

(동명대학교 교양학부)

## 目次

- I. 들어가는 말
- II. 정치사 연구의 회고
  - 1. 시기별 연구경향
  - 2. 주제별 연구경향
- III. 경제사 연구의 회고
  - 1. 시기별 연구동향
  - 2. 주제별 연구동향
- IV. 앞으로의 과제

## I. 들어가는 말

한국사연구에서 지역사 연구가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는 그 이전부터 지역에 대한 연구성과를 나름대로 축적해 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수도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 연구는 부산이 유일하였다.<sup>1)</sup>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각 지역사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문화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역사학에서는 지방과 지역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면서,<sup>2)</sup> 지금까지의 지방사보다는 지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3)</sup>

지금까지 부산지역사 연구에 대한 연구는 이미 몇 편의 연구사 정리가 있었다.<sup>4)</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참고하면서

- 
- 1) 서울특별시가 1957년부터 간행하기 시작한 『항토서울』과 부산광역시에서 1962년부터 간행한 『항도부산』을 들 수 있다. 두 학술지는 서울과 부산과 관련된 주요 연구성과를 논문으로 게재하고 있는 전문 학술지라 할 수 있다.
  - 2) 지역과 지방에 대한 의미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입장에서는 전근대적인 사회에서의 차별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근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무시할 수도 없다.
  - 3) 이해준,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2001.
  - 4) 홍연진, 「부산의 지방사 연구현황」 『항도부산』 8,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1; 홍연진, 「부산사 연구현황」 『항도부산』 10,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3; 강대민, 「부산사 연구의 평가와 대안」 『문화전통논집』 10, 경성대학

1960년대 이후 조선후기의 정치사와 경제사 분야의 부산지역의 연구사를 정리하고자 한다.<sup>5)</sup>

조선후기사가 한국 역사학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라는 것이다. 때문에 조선후기사는 전근대 사회구성체의 계기적 발전과정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며, 근대사회 이후의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를 던져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6)</sup>

지금까지 조선후기사 연구는 이런 방향에서 여러 분야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sup>7)</sup> 이에 본고에서 주목하는 조선후기의 정치사 연구에서는 국가 권력구조와 정치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었으며, 경제사 분야에서는 경제구조와 변동이라는 시각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전근대사회에서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찾아서 서술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포괄적으로 정치사와 경제사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sup>8)</sup>

교 한국학연구소, 2003; 강대민, 「부산사 연구기관과 연구현황」 『문화전통논집』 2,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4.

5) 본고에서의 정치사와 경제사 분야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우선 정치사는 지방행정과 제도, 국방 문제를 포함한 군사 전반의 문제, 특수행정으로 왜관의 행정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사는 재정과 부세, 대외무역을 대상으로만 한정하였다. 이것은 대외관계가 『항도부산23호』에서 별도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6) 근대사연구회 편, 「총론」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상)』, 도서출판 한울, 1987,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7) 정구복 외, 『조선시대 연구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강만길 역음,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 II. 정치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 1. 시기별 연구동향

지금까지 조선후기 정치사 분야는 국가 권력구조와 정치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제도, 정치세력, 정치운영, 정치운영론의 측면에서 연구되었다.<sup>9)</sup> 그리고 지방행정과 제도의 변화가 연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역사 연구의 시각에서는 지방제도의 시행, 재지세력의 형성, 정치이념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어 연구되었다. 이런 입장에서 조선후기 부산지역의 정치사 연구현황을 정리하고, 하고자 한다.

<표 1> 조선후기 부산지역 정치사의 시기별 연구동향

분야 \ 시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합계
행 정	1	1	1	2	1	6
국 방		1			8	9

조선후기 부산지역 정치사 분야의 시기별 연구동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는 동래부와 왜관의 행정을 다

8)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학연구문헌목록집』 200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연구회보』 1(1973년)~138(2007년)호를 참조하여 조선후기 부산 관련 연구성과를 발췌정리하였다. 아래의 연구사 정리는 그간의 연구를 알리고 정리하며 한 곳에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하였다.

9) 근대사연구회 편, 「조선후기 정치사연구의 방향」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 문제(상)』 도서출판 한울, 1987, 55~58쪽. 하지만 정치와 경제 두 쪽에 걸친

룬 논문이 한 편 있다. 1970년대에는 부산 지역의 봉수대를 연구한 논문과 동래부사의 교체 실태를 연구한 논문 한 편으로 모두 2편의 글이 있다. 1980년대에는 경상좌수사와 다대포첨사의 교체 시대를 다룬 한 편의 논문이 있을 뿐이다. 1990년대에는 부산의 행정과 관방을 포괄적으로 다룬 논문과 부산지역의 지배세력을 다룬 한 편의 논문으로 모두 2편이 있다. 2000년대에는 부산의 정치세력을 다룬 논문 한 편, 금정산성을 다룬 논문 6편, 동래읍성을 다룬 논문 한 편, 기장현의 관방을 다룬 글 한 편으로 모두 9편의 논문이 있다.

조선후기 부산지역 정치사 분야의 시기별 연구동향의 특징은 지방행정 관련 연구는 시기별로 고르게 연구되고 있으며, 국방 관련 연구는 2000년 이후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연구자가 다수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구의 편수가 많지 않으며, 연구 주제도 다양하지 못하다.

## 2. 주제별 연구동향

### 1) 지방행정

지방행정의 실무와 국방을 책임진 부산지역의 수령과 군관의 임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단순한 임기에 초점이 두어졌지만, 이를 통하여 부산의 행정 실상과 특징을 살핀 선구적 연구로 평가할 만하다. 이에 조선시대 부산지역의 행정을 책임진 동래부사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살폈다.<sup>10)</sup> 동래부사에

10) 이원균, 「조선시대의 守令職 교체실태-동래부사의 경우-」 『부대사학』 3, 부산대학교 사학회, 1979.

계는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법정임기가 있었으나 처음부터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은 부사의 교체가 잦아서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교체되기 때문이었다.

임기만료로 인한 정상적인 교체가 극히 적었던 반면에 동래부사의 대부분은 징계·사직·전직·면직·당상·신병·상피 등으로 말미암아 임기가 차기도 전에 교체되어 심한 數遞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도 징계·사직·전직은 동래부사의 삭체현상을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징계가 많았던 것은 지방에서 발생하는 조그마한 사건이나 수령이 저지른 사소한 과오까지도 들쳐 내어 수령에게 책임을 묻는 조선왕조 정부의 지방관에 대한 인사시책 때문이었다. 사직은 영달의 야망을 품고 있는 문관 수령들이 수령직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며, 전직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다른 관직으로 옮길 수 있게 되어 있는 수령직을 정부가 법전의 규정을 무시해가면서 ‘朝授夕換’의 무절제한 인사행정을 편 데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동래부사의 1인당 평균재임기간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부사의 교체시에 구관과 신관의 이임과 도임의 시간적인 불일치는 388년 3개월 중 26년이라는 공석기간을 빚었다.

한편 수령의 빈번한 교체는 많은 폐단을 낳았다. 첫째, 수령이 교체될 때마다 의례적으로 행하는 신영예절과 과중한 쉼마가의 징수는 연례행사처럼 되어 민폐가 많았다. 둘째, 수령의 지위가 안정되지 못함에 따라 향리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향리들은 갖은 방법으로 부정을 자행하여 민중들을 괴롭혔다. 셋째, 수령들도 그들 나름대로 관직을 믿고 의지하여 살 수 없는 불안한 처지였기 때문에 오로지 營産에만 뜻

을 두어 과외의 징령을 일삼는 등 온갖 부정을 자행하였다. 이와 같이 수령의 잦은 교체는 민중을 도탄에 빠뜨리고 관리의 기강을 무너뜨린 하나의 중대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부산지역의 국방을 책임진 수사와 첨사의 교체실태를 『경상좌수영선생안』과 『다대포선생안』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sup>11)</sup> 첫째, 조선시대의 수사에게는 2년, 그리고 첨사에게는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법정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기는 처음부터 잘 지켜지지 아니하여 수사와 첨사의 대부분은 임기가 만기되기 전에 교체되었다.

둘째, 수사와 첨사의 상당수는 징계를 받아 본의 아니게 교체되었다. 당시 징계률은 매우 높아 수사가 26.6%, 첨사가 30.9%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와 첨사의 징계률이 높았던 것은 국가에서 수사·첨사 등의 관직만을 설치해 둔 채 이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는 데서 오는 비위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첨사의 징계률이 수사의 그것보다 높았던 것은 수사가 평정하는 殿最가 첨사에게는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에 수사는 전최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수사와 첨사는 각각 교체시에 전임자의 이임과 후임자의 도임이 시간적으로 일치되지 않아서 잦은 공석기간을 내었다. 먼저 수사의 경우 모두 211회의 교체사례 중에서 공석기간을 낸 것이 50회이며, 그 기간도 최하 4일에서 최고 2년 4개월 15일이나 되어 총공석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즉 공석율은 3.5%였다. 그리고 첨사의 경우에는 모두 173회의 교체사례 중에서 공석기간을 낸 것이 102회이며, 그 기간도 최

11) 이원균, 「조선후기 지방관직의 교체실태-《경상좌수영선생안》과 《다대포선생안》의 분석-」 『부대사학』 9,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5.

하 1일에서 최고 1년 29일나 되어 총 공석기간의 무려 17년 9개월 13일에 달하였다.

넷째, 수사와 첨사에 대한 빈번한 징계와 법정임기를 무시한 무절제한 인사행정은 심한 삭체현상을 빚었다. 그 결과 수사의 1인당 평균재임기간은 법정임기 2년에서 7개월 23일이나 모자라는 1년 4개월 7일이었으며, 첨사의 1인당 평균재임기간은 법정임기 2년 6개월에서 실로 1년 12일이나 미달되는 1년 5개월 18일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부산지역의 특수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대일무역과 관련된 직제를 살펴본 연구이다.<sup>12)</sup> 이 연구는 왜관에서 통역을 담당한 왜학역관의 업무를 보좌한 小通事에 주목하였다. 소통사의 직제와 실무, 소통사의 밀무역, 소통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소통사 관련 금석문 자료인 동래부사 李澤滄善政碑, 柔遠閣先生埋案感古碑를 분석하였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산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이며 연구의 깊이를 더한 연구이다.

소통사는 중앙에서 차견하는 왜학역관인 훈도 별차를 보좌하는 동래부 소속의 하급역관으로 왜관의 다양한 실무를 맡고 있어서 왜관 가까이 있는 조선인 마을인 초량촌에 사는 사람이 많았다.

소통사는 조선전기 부산포왜관 때부터 존재하였던 倭學生徒에서 기원하였다. 소통사의 인원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1739년부터 30명으로 규정하였다. 소통사는 직책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직임을 가지고 있었다. 首通事는 공작미

12) 김동철, 「17~19세기 동래부 소통사의 편제와 대일활동」 『지역과 역사』 17, 부경역사연구소, 2005.

지급을 맡은 戶房通事를 겸직하면서 통사 전체를 통사하는 소통사의 대표적인 존재였다. 소통사는 왜관에서의 일상적인 업무는 물론이고, 통신사행과 문위행이 있을 경우에는 하급 역관으로 수행하여 외교업무를 맡았다. 소통사는 왜관에서 정상적인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감찰하는 실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활발하고 다양한 밀무역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潛商의 대표적인 한 부류였으며, 이들은 일본인에게서 밀무역 자금인 路浮稅를 대부받기도 하였다.

소통사는 왜관과 직접 관계되는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대마도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일본 측의 뇌물이 제공되었다. 특히 1713년에는 通事拜領銀이라는 은이 지급되었다. 소통사는 이 은으로 義田이라는 토지를 구입하였다. 이 처럼 일본인과 소통사는 유착되어 있었다. 따라서 소통사는 조선 사람이지만, 오로지 대마도를 위해 일한다고 인식할 정도였다. 일본인과 소통사는 상호 필요에 따라 긴밀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통사가 1774년에 세운 동래부사 李澤遂 선정비에서 왜관의 명칭을 和館으로 적은 것은 이러한 공생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다.

소통사는 通事廳이라는 고유한 업무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통사청에 근무하는 자신들의 전통을 소통사의 명단인 先生案의 작성을 통해 유지해 갔다. 소통사 출신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로는 朴琪淙을 들 수 있다. 이 박기종이 중심이 되어 1906년 柔遠閣先生埋案感古碑를 세웠다.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의 정치세력에 대한 연구이다.<sup>13)</sup> 첫

13) 민선희, 「조선후기 동래의 향반사회와 무청-조선후기 향반사회의 지배구조와

째, 조선후기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와 사회적 신분이동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동래지역의 무임집단과 향반사회의 권력구조를 사례로 연구하였다.

조선후기에 동래지역은 문과 급제자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었다. 이런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동래는 군사적 요충이었으므로 상비군이 많았으므로 이를 이끌어 가는 무인층이 필요하였다. 자연히 무인층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었다.

조선후기 각 지방에는 행정을 담당할 작청과 군사업무를 수행한 무청이 있었다. 무청은 군대 업무와 함께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동래지역에 무청이 설치된 것은 독진이 설치된 1654년에서 1658년경이었다.

무청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8청이 근간을 이루었다. 무청의 무임들은 직계, 신분, 역할이 달랐다. 이들 무임은 직계상으로 장관류, 군관류, 포교류로 분류된다. 군역상으로는 급료를 받는 군관, 수포 대상에서 제외된 한산자충, 일반 군보와 다름없이 군역을 부담하는 부류의 세 종류로 나뉜다. 동래지역 향반들은 급료를 받는 상급 무임직은 지위의 과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무청의 무임들은 조선후기 향촌사회구조와 지배질서 속에서 운영되었다. 동래에서는 무청이 생긴 이래 무임을 지낸 자를 기록하는 선생안을 작성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것은 무임집단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들 나름의 질서를 강화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래에서는 상급 무임을 배출화는 양무당이라는 조직과 하급 무임을 역임한 퇴임자들로 구성되

---

사회이동 문제에 대한 시론-」 『역사학보』 139, 1993. 한편 이훈상·민선희, 「조선후기 동래의 지배 엘리트와 이에 관한 고문헌 자료」 『항도부산』 10,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 1993에서 먼저 자료를 소개한 적이 있다.

는 세검당이 존재하였다.

무임의 최상급 직임인 증군은 향반들이 독점하였으며, 각 무청의 수임도 향반들이 대부분 차지하였다. 수임직은 세습화되었다. 동래의 향반들은 가문의 위세에 따라 무임을 역임하고, 향촌사회가 무임직을 통제하였다. 무임직의 상급직에는 여러 성씨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무임집단의 직임별 출신 성분에 대한 규제와 무임 집단의 강한 조직화 현상은 무임 집단의 폐쇄화와 더불어 신분상승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었다.

둘째, 동래지역의 향권을 장악하고 있던 향반들을 향안, 향교의 경임록, 안락서원의 원장을 분석 조선후기 ehdfowl역의 지방세력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도 있다. 향교의 교임, 서원의 원임, 향청의 향임과 향회의 임원을 남평 문씨, 경주 김씨, 죽산 박씨, 동래 정씨, 여산 송씨 등 5개 성씨가 동래향반의 구체적인 성씨였으며, 향임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향론을 주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14)</sup>

셋째, 17~18세기 부산의 행정과 국방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글도 있다.<sup>15)</sup> 조선시대 17~18세기에 부산이 우리나라의 관문 도시로서 기틀이 마련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대왜 회유정책으로 마련된 왜관의 설치와 아울러 왜구에 대비하는 국방도시로서의 성격을 띠면서부터였다. 17~18세기 부산의 행정과 국방은 지방사회에 대한 국가의 집권력과 국방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행정 조직의 개편과 체계화를 통한 행정의 일원화, 군사지휘체계의 독립과 군사

14) 이원균, 「조선후기 동래부 향반에 대하여」 『항도부산』 22,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2006.

15) 김강식, 「17-18세기 부산의 행정과 관방」 『항도부산』 10,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3.

시설의 강화, 군역자원의 확보로 진행되었다.

17~18세기 부산의 일반행정조직과 체계는 중앙과 지방세력간의 세력장악이란 측면에서 중요하였다. 그것은 군현제와 면리제의 시행으로 접목되었다. 국가권력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확립이란 측면에서, 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치조직의 행정조직화를 통해 민치·자율행정의 확보를 추구해 나갔다. 이것이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행정적인 면에서의 과도기적인 면모이며, 지방행정제도의 변화와 발전적 모습이었다. 동래부에서도 수령권의 강화와 7면 22동 79리의 면리제 실시가 확인된다. 또 행정체계면에서는 부산지역도 역시 관치·자치·실무행정조직 간에 삼각체제가 성립되어 병립하면서 수령권을 통한 중앙집권력이 강화되어 나갔다.

부산지역의 국방은 국방체계면에서는 육군과 수군으로 이원화되었으며, 사회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국방자원의 확보와 국방재정의 확보가 중요하였다. 이는 군사시설과 군사조직의 강화로 이어졌다. 즉 군사조직과 지휘체계상의 독진화, 군사방어체계의 변화에 따른 동래읍성·금정산성의 수축이 단적으로 이를 말해준다. 다음으로는 용병제의 실시라는 군사모병법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무장층의 확보와 수군의 집중배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7~18세기의 부산지역의 행정과 관방문제는 중세봉건사회의 체제의 붕괴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수용하면서 진행되었으며, 부산의 경우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이런 면모들이 더욱더 일반화되고 심화되었다. 한편 17~18세기 부산지역의 군사행정과 일반행정이 미분화된 점은 중세

봉건사회의 면모를 보여주지만, 행정의 전문화와 조직의 세분화는 근대행정으로의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며, 이것은 조선시대의 과도기성을 말해준다.

한편 동래부와 왜관의 행정에 대한 선구적이고 개관적인 연구도 있었다.<sup>16)</sup> 동래와 부산 지역이 갖는 역사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행정과 특수행정으로 나누었다. 대내 행정에서는 일반행정으로 동래도호부, 군사 행정으로 경상좌수영과 동래독립진, 외교 행정으로 부산왜관을 고찰하였다. 동래도호부에서는 관할구역(면·동·리), 행정기구 및 관원, 여러 역원 및 봉수대, 동래독립진에서는 동래수성장, 동래독진, 경상좌수영에서는 병력과 군비, 좌수영성 관아 병고 봉산 수성군, 부산진 다대진 절영도진을 살폈다. 부산왜관에서는 왜관의 변천, 초량왜관의 행정 기구, 왜관과 범죄, 구호 규정을 살폈다. 한편 각 서술에서 많은 원자료를 제시하다.

## 2) 국방

먼저, 부산의 대표적인 산성인 금정산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경우이다.<sup>17)</sup> 비록 금정산성의 복원과 연관된 연구이지만, 금정산성을 다각도로 접근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조선후기의 관방시설의 변화 속에서 금정산성의 위치를 주목한 연구이다.<sup>18)</sup> 조선전기의 관방시설로서의 경상도 지역의 산성

16) 이완영, 「동래부 및 왜관의 행정 소고」 『항도부산』 2,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3.

17)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금정산성과 금정진』 2004; 한편 이 연구성과는 한국성곽연구회 『한국성곽학보』 6, 2004에 게재되었다.

18) 차용걸, 「조선후기 관방시설의 변화와 금정산성」 『금정산성과 금정진』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4.

건립을 주목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관방 개념이 변화하면서 산성을 축조하여 운영하였다. 조선후기에 독진이 설립되면서 동래에는 금정산성이 축조되었으며, 금정진이 두어졌다. 조선후기 산성의 특징은 규모가 장대한데 금정산성이 가장 크다. 重郭式으로 되어 있었다.

둘째, 사적 제215호인 금정산성과 금정진의 시굴조사를 통하여 금정산성을 직접 확인된 결과를 정리하였다.<sup>19)</sup> 금정산성의 성벽도 일정한 구간별로 성벽을 축조해 나간 것이다. 추정된다. 성벽석은 대부분 주변의 자연암반에서 떼어낸 판석상의 할석을 사용하였으나, 제4 망루와 동성벽 사이, 문지 주변, 중성벽에서 비교적 큰 사각형 할석으로 축조되었다. 이들 구간은 대체로 산성 내에서도 평지에 가까운 방어외곽의 취약한 지점으로, 서쪽 성벽의 으뜸골기도원 지점을 제외하면 주로 동래 쪽에 면한 성벽에 방어를 의식하여 축조된 인상을 주고 있다. 중성벽의 경우는 처음 축조 때의 부실한 성벽축조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비교적 양호하게 축조되어 있다. 체성의 폭은 대체로 350cm이며, 외벽에서 110~210cm 안쪽까지 잡석 채움하였고 그 안쪽은 토사로 뒷채움하였다. 한편 금정진의 시굴조사에서 폭 70~80cm, 동서 5.6m 남북 2.4m의 담장이 확인되었으며, 전체적인 주변의 지형적 상황으로 볼 때 금정진의 입지는 남북으로 비교적 급한 경사를 이루는 지형에 3단의 층단식 기반구조를 만들고 건물이 배치되었을 것이다.

셋째, 조선후기의 僮役의 변동과정 속에서 금정산성의 추이

19) 나동욱, 「금정산성 및 금정진의 조사 현황」 『금정산성과 금정진』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4.

를 살핀 글이 있다.<sup>20)</sup> 금정산성의 승영을 통해서 승역이 운영되던 실상을 이해하고, 국가재정과 조세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승역의 변동상을 추적하였다.

부세제도는 전근대 사회구조의 소산이었다. 17세기 초엽의 僧役 강화는 부세제도의 변동 추세 속에서 대체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지배 관료들의 시도에 따른 것이었다. 축성역을 비롯한 토목공사에 승군을 징발 사역하고 산성을 축조한 뒤 승군을 편성해서 군역을 지게 한 일은 17세기 이후 관행화되었다. 그러나 각 사찰이 피폐 몰락하자 승역도 동요하고 완화되었다. 이에 1756년 義僧防番錢을 거두는 番錢代納制로 바뀌며 부역노동으로서의 승역이 붕괴되었다.

금정산성의 승영은 18세기 초엽 산성이 축조된 이후 승군의 주둔지로서 운영되었다. 국청사와 해월사의 승군은 募僧建刹의 방식으로 산성 역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산성 수호를 위한 승군으로 활동하였다. 금정산성이 헐려진 후 두 사찰은 헐려지고 19세기에 산성이 재건되었다. 이 때는 국청사만 승영으로 기능하였다. 순조대의 금정산성은 별장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다. 둔전을 조성하고 모입민을 받아들이는 등 산성 운영방식이 바뀌었다. 18세기 중엽 이후 승역은 완화되었다. 금정산성의 승영이 위축된 것은 승역의 변동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넷째, 조선후기 지방군제와 금정진에 대한 연구이다.<sup>21)</sup> 조선전기 동래의 군사체제는 진관체제에 의해 운용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진영체제로 대체되었으며, 왜적의 장

20) 윤용출, 「조선후기 승역의 변동과 금정산성」 『금정산성과 금정진』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4.

21)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변천과 금정진」 『금정산성과 금정진』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4.

기인 조총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등 읍성보다 방어에 유리하였으므로 산성을 임진왜란 중 많이 수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1665년 독진이 되고, 1739년(영조 15) 수성장, 그리고 1749년 독진겸수성장이 됨으로써 동래는 스스로 조련 등을 주관하게 되었다.

조선전기에 동래의 성은 좁아서 왜적이 침입할 경우 백성을 다 수용할 수 없고 왜적은 수전에는 강하나 육지에 오르면 불리하다고 하여 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임진왜란에서 조선 성곽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읍성 보다는 산성이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됨으로써 임진왜란 중 산성을 중심으로 축성이나 개축이 이루어졌다. 동래에도 산성을 축성하는 의견이 효종대부터 제기되었지만, 1702년(숙종 28)에 이르러 경상도 관찰사 조태동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금정산성이 수축되게 되었다. 숙종대는 도성의 방어를 위해 도성의 개축과 북한산성의 수축이 이루어졌고, 지방의 관방에도 주목하는 가운데 경상도 동래에도 금정산성이 축조되었다.

금정산성이 수축된 후 금정진의 군병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금정산성이 처음 수축된 숙종대에 금정산성에 속오군이 9哨半, 아병이 5哨, 승려가 대략 300~400 정도였고, 군관 및 이노작대를 합하면 총 3천여 명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순조대에는 軍任에 대한 기록이 자세한데, 1832년 간행된 『경남도읍지』에 의하면 별장 1인을 비롯하여 군관 2인, 진리 2인, 지인 2인, 사령 4명이 두어졌다. 1832년 간행된 『경남도읍지』에 비해 1894년 간행된 『영남진지』에 금정진에 새로운 관직이 등장하고 인원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조선후기 금정산성진의 설치와 운영재원을 다룬 글도 있다.<sup>22)</sup> 금정산성의 설치는 남인들의 산성관방론의 입장에서 추진되어 숙종 28년에 수축되고, 붕괴된 것을 순조 6년에 대대적으로 수축하였다.

금정산성의 운영재원은 屯租, 김해 산산창과 양산 감동창의 별향미의 이자, 각 읍에 내어준 미곡의 이자 즉 官廳殖利로 충당되었다. 이 가운데 둔조와 관청식리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금정산성진의 운영재원이 둔전 경영과 관청식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 수입의 지출 용도는 소속 구성원의 月俸이나 朔料로 지출된 액수가 많았다. 그 밖에 紙筆墨價, 沈醬代, 饌價, 馬太代, 朔布의 명목으로 별장에게 지급하였다.

여섯째, 금정산성 및 금정진에 대해 문헌 및 현장자료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sup>23)</sup> 부산지역은 예상외로 많은 현장 자료와 그에 따른 향토사의 활기를 느껴볼 수 있는 고장이다. 금정산성 및 금정진에 대해서도 지역사연구의 차원에서 별도의 자료집이 나온 사실은 일단 주목해 볼 만한 현상이다. 다만, 전반적인 연구상황이 아직은 읍지 및 현장 자료의 소개 영인 및 기초적인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읍지, 지도류, 금석문 자료를 분석하고, 연대기와 읍사례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발굴의 측면에서는 금정진에 별장이 설치된 실질적인 시기는 고종대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 축성 논의와 관련하여 동래를 중시한 인식 등을 다시 강

22) 이장우, 「조선후기 금정산성진의 설치와 운영재원」 『금정산성과 금정진』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4.

23) 전호수, 「금정산성·금정진 자료연구의 현황과 과제」 『금정산성과 금정진』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4.

조하고 싶다. 특히 금정진에 별장이 설치된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대기류, 읍지류, 읍사례류의 기록이 각각 1824년, 1832년, 1871년 이후로 각기 다르게 기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끝으로 금정산성의 복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東萊府邑誌』 1871년에 기술된 성곽 시설에 대한 내용이 참조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후기 부산지역의 군제를 기장현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한 경우이다.<sup>24)</sup> 1764년 기장현감 河命祥 解由文書를 읍지, 고지도 등과 비교했다. 조선시대 군제연구는 주로 관찬사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조선전기의 오위와 진관체제가 임진왜란 이후 오군영과 속오군체제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큰 연구성과를 이루었다. 반면 지방 군제에 관련된 관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된 1764년 기장현감 하명상 해유문서는 조선 후기 군제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기장의 해유문서와 다른 사료의 비교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장현에 부과되는 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해유문서의 작성 시기가 良役變通策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던 영조 시기라서 제도의 실질적 시행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하명상의 해유문서에는 군기와 군액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 일본 관방의 하나인 기장현의 방비 태세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읍지와 고지도 등을 비교하여 당시의 정확한 군비 상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해유문

24) 이왕무, 「1764년 하명상의 해유문서를 통한 기장현의 관방 연구」 『장서각』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서에 나타나지 않는 군선의 배치 상황은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선후기 부산지역의 국방체계를 군역자원과 군사체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성과도 있다.<sup>25)</sup>

그리고 이 문제를 지방행정의 현안이 해결되는 과정과 연계해 설명하였는데, 특히 경상좌수사와 동래부사 사이의 갈등·대립의 양상을 살폈다. 임진왜란 이후 동래지역은 국방상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관방시설이 집중되었다. 그 결과 18~19세기 동래에는 수영과 휘하의 진보, 동래부의 육군과 수군의 각종 관방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군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래는 읍세가 약해 늘어난 군액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疊役과 黃口添丁 등의 폐단을 야기하며 민의 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민은 군역에서 이탈해 다시 도망하게 되어 동래의 군역 운영은 폐단을 드러냈다.

동래의 군역운영이 파행을 겪게 되자, 관심을 가진 자는 경상좌수사와 동래부사였다. 軍多民少 현상에 의해 과생된 첩역과 이에 따른 만의 유리·도산은 안정적인 군역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더구나 이것은 경상좌수영과 동래부의 재정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였으므로 이들은 군역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 재정 손실을 막고자 하였다.

이들이 첩역과 유망의 대책으로 주목한 것은 바로 증가된 군액을 조정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군액의 조정을 두고 보인 경상좌수영과 동래부의 입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양자는 기본적으로 수군과 육군으로 서로 다른 위치인데다가

25) 장경준, 「18·19세기 동래지역의 군역운영과 폐단, 그리고 이를 둘러싼 수사-부사의 대립」 『부대사학』 30, 부산대학교 사학회, 2006.

지휘관인 수사와 부사는 무관과 문관이라는 점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 군폐에 대처하는 방향이나 해법은 같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군액의 조정이 좌수영과 동래부의 재정과 직결된다는 데에 있었다. 한 예로 부사李文源이 수사의 城丁軍官의 설치를 반대한 것은 동래부의 군역자원이 줄어 결과적으로 동래부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사 尹弼秉이 수사의 군액 감액에 반대하고 이송을 주장했던 것은 왜인 접대로 재정지출이 많았던 동래부 재정에 이롭지 않은 데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군액 조정 문제를 풀려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군액 조정의 문제는 재정과 연결되면서 이들이 과직을 감수하면서도 서로 대립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 Ⅲ. 경제사 연구의 회고

#### 1. 시기별 연구동향

조선후기 경제사 분야에서는 경제구조와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농업생산력, 토지소유관계, 토지소유형태와 농업경영, 상품경제의 발달과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될 수밖에 없다.<sup>26)</sup>

그런데 이 문제가 지역사 연구의 시각에서는 농업생산력의

발전, 토지소유관계와 농업경영 형태의 변화, 상품유통 구조의 변화와 상인의 성장, 부세제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될 수밖에 없다.<sup>27)</sup> 이런 입장에서 조선후기 부산지역의 경제사 연구현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조선후기 부산지역 경제사의 시기별 연구동향

분야 \ 시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합계
재정			1	2		5
무역	1			8		9

조선후기 부산지역사 연구에서 경제사 분야의 시기별 연구동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는 부산의 무역 전반에 대한 논문이 한 편이 있다. 1980년대에는 동래부의 축성역과 부역노동을 다룬 글이 한 편 있다. 1990년대에는 왜관의 무역, 무역상인, 무역품을 다룬 글 7편과 동래과 기장의 삼정을 다룬 논문 2편으로 총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조선후기 부산지역사 연구에서 경제사 분야의 시기별 연구동향의 특징은 주제별로 보면 재정 관련 글과 대일 무역 관련 글이 대부분이다. 시기별로는 199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지역사 연구에 관심이 고조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부산의 특징을 찾고자 한 연구자들의 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관심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

26) 근대사연구회 편,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하)』 도서출판 한울, 1987, 15~188쪽.

27) 근대사연구회 편,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하)』 도서출판 한울, 1987, 231~266쪽.

쉽게 느껴진다.

## 2. 주제별 연구동향

### 1) 재정

먼저 조선후기 부산지역의 재정을 연구한 경우이다.<sup>28)</sup> 첫째, 동래부의 조세수취와 세출입을 살펴보았다. 토지와 인제에 대한 동래부의 모든 수취, 동래부의 수입 중 중앙과 지방에 대한 상납, 끝으로 동래부의 세출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7~18세기 부산지방(동래부)의 재정에서도 이양법의 보급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성의 증대로 18세기를 전후로 하여 일어나 커다란 변화가 반영 되었다. 그것은 안정적인 소농민경영의 확립과 이에 따른 지주-소작관계의 확대·발전 및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나타나며, 아울러 국가의 수취체제(국가의 수입구조와 지배 수취기구)에 있어서도 대전환을 이루었다.

조선후기에는 貢賦의 지세화(대동법의 실시), 身役의 물납화, 여러 수취의 토지에의 집중 및 조세 금납화의 진전 등 수취체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후기 국가재정은 지세, 신역, 還耗가 근간이 되었다. 각 지방관아에서 수취하는 여러 조세는 자신의 재정에 충당할 뿐만 아니라 일정부분을 중앙과 營鎮에 상납하고 있다.

동래부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료인 읍지는 18세기 중엽 이후의 것이므로 18세기 중엽 이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8) 정아근, 「17·18세기 부산지방(동래부)의 재정」 『항도부산』 10,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3.

또 조선후기 조세 수취체계에 큰 획을 이루는 대동법이 동래부에서는 1679년부터 시행되며, 균역세 수취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의미하는 균역법이 1750년에 시행되었으므로 18세기 초기와 중기를 중심으로 조선후기의 수취체계가 대전환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18세기 부산지방의 조세수취는 지세, 신역세, 환모에 의존하고 있었다. 다만 총조세수취량 중 상납분에 대해서는 왜관경비로 동래부에 남겨졌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동래부의 총세입 규모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비가 61%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倭使 접대를 비롯한 倭供을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비 이외의 동래부의 주된 세입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였다.

조선후기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은 전반적으로 궁핍하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농민은 가혹한 수탈을 당하고 있었다. 동래부의 농민도 대동 상납에 따른 科外雜稅는 없었지만, 토지에 있어서의 과외잡세, 軍役價의 疊徵 및 환곡의 부담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둘째, 부세제도 가운데 균역에 대한 연구도 있다. 동래부의 축성역과 부역노동을 연구한 경우인데,<sup>29)</sup> 축성이 가능하였던 정치적 배경을 아울러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부역제도의 변동 실상을 파악하였다. 조선후기의 동래부는 해방의 중심지이며, 대외 교섭의 통로였다. 이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시되었다. 17세기 말엽부터 동래부의 군비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가 강구되고, 그 결과 숙종 28

29) 윤용출, 「18세기 초 동래부의 축성역과 부역노동」 『한국문화연구』 2,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9.

년(1702)에는 금정산성이 축조될 수 있었다. 아울러 동래부의 군역도 크게 증대하였다. 이후 軍多民少의 문제는 동래부의 최대 민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8세기 말 동래부에서의 疊役 문제는 관내에 수군의 영진이 집중되어 있음으로써 다투어 응역자를 확보해야 했던 특수한 사정과도 결부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8세기 이후 납포군이 크게 늘어났다.

府城을 새로 개축한 것은 영조 7년 부사 정언섭이 주도에 의한 것이다. 축성은 군사적인 필요성에만 의거한 것은 아니었다. 무신란 이후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서 영남 재지세력의 견제를 목적으로 부성의 축조, 지방군 편제의 재정비 등이 모색되었다. 관찰사의 협조 하에 경상도 각 관의 烟軍과 승군이 징발되었으며, 동래부 공작미의 質販取殖을 통해 역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은 정치적 배경에 힘입은 것이다.

『동래부축성등록』에 의하면 축성역에 동원된 役軍은 네 가지 부류였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군이였다. 연군은 일반 민정으로서 요역 징발된 농민들이었다. 연군에 버금가는 중요한 징발 부역군은 승군이였다. 경상도 전 지역의 사찰에서 차출된 부역승군들은 이 역사에서 가장 장기간 부역하였다.

축성역에 징발된 연군은 동래부와 인근 군현을 포함한 7색 소속의 약 3만명, 연인원으로는 19만여 명에 달하였다. 당시 동래부에서는 부성의 수축을 대비한 수성절목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에 의하면 동래부 각 면의 민정이 각기 면별 작업구역에서의 축성역에 징발될 수 있었다.

연군의 부역은 요역제에 의거하여 민정의 노동력을 징발하

였음을 의미한다. 조선후기의 요역은 물납세화 되고 있었지만, 역역으로서의 노역이 일체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단 요역제 운영의 방식에는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역민식의 규정이 사실상 폐기된 상태에서 지방관의 역민식에 대하여 오히려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었다. 18세기 초의 동래부 축성역이 거의 전적으로 징발부역군에 의존하였으면 서도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요구된 까닭은 여기에 있었다. 이 시기 요역제 운영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대납제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防雇錢, 民錢 등의 징수가 그것이다.

축성역은 일찍부터 노역의 종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축성역은 別例調發하는 관행이 가장 늦게까지 잔존했던 분야에 속한다. 축성역은 비교적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토목공사이고, 게다가 수축의 역사가 빈번하게 되풀이되지 않을 수 없는 특성, 성지의 유지·보수는 지방관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 등이 그러한 조건을 빚어내고 있었다. 동래부에서의 축성역이 역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군의 고용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은 영조 7년의 역사가 끝난 직후에 마련된 새로운 수성절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이후의 동래부 축성역에서 募軍修補하는 방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노역으로서의 요역, 그것의 마지막 형태마저 폐기되고 있는 실상을 보여 준다.

축성역의 부역군으로서 징발된 승군들은 이 시기 승역의 담당자들이었다. 18세기 초 동래부 축성역에서는 경상도 각 관의 승군들이 징발되고 있었다. 승군은 이같은 각종 토목공

사에서의 부역노동을 비롯하여, 의승의 신역 그리고 지방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형태의 물자를 조달하는 잡역을 걸머지고 있었다. 조선후기 僧人의 부역노동은 종래 농민이 부담하던 요역·신역·잡역의 부역노동을 새로운 형태로 전가받은 것이다. 부역제도의 붕괴과정에서 지배층의 대응방식은 이러한 승역의 재편성 강화에서 그 대안을 모색했지만, 승도들의 피역 저항은 다시 승역의 완화를 불가피하게 했다. 결국 승역의 부역제도 또한 붕괴되어 갔다.

조선후기의 농민층은 종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은 중앙이나 지방관부에 있어서 현물 제정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대시켰다. 전결세는 크게 증대되었고, 각종 명목의 잡세가 신설되었다. 군역과 요역을 중심으로 한 요역이 물납세로 전환될 필요성은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후 군역세·잡역세의 징수는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후기의 요역은 현물세, 주로 전결세의 한 몫으로 전가되는 군현 단위의 잡역세로 개편되어 갔다.

셋째, 조선후기 기장현의 전세와 대동세, 군역세와 진상, 환곡세와 잡역세를 파악하여 조선후기 부세제도 변동의 추이를 밝히고자 하였다.<sup>30)</sup> 전결의 크기에 따라 구분할 때, 조선후기의 기장현은 殘邑에 속한다. 조선후기 지배층 관료들에게 있어서 기장현은 경상좌도 연변의 궁벽한 잔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기장현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남동부 연해 지역을 방어하는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기장 지역은 변방의 변란을 대비하는 땅으로서 외군의 침략을 막

30) 윤용출, 「조선후기 기장현의 삼정 운영」 『한국문화』 8,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96.

아내는 요긴한 길목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수군 방어체계의 중요한 근거지로 자리잡았다.

기장현에서도 時起結數에 따라 전세·대동세를 부담하였다. 이곳의 전세는 1475부터 동래를 倭料 수납의 都會官으로 삼게 됨으로써, 백성들 스스로 이곳에 납부토록 하였다. 기장현의 전세는 조선후기에 관내의 무지포에서 선편으로 부산진 선창까지 수송하는 방식에 따르게 되었다. 기장현 대동미의 경우도 전세와 함께 釜倉에 납부하였다. 이때 선혜청에서 구획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량을 儲置米 명목으로 본현에 남겨 두었다. 기장현의 대동미는 울산·양산과 더불어 왜관을 구제하는 용도로 지정되어 부창에 下納하게 되었다. 기장현에서는 1720년의 기장 양안 이후 오랫동안 양전을 시행하지 못했다. 전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개량 조치가 요구되었다.

1832년 무렵의 기장현 군액은 2,185명인데, 당시 기장현 전체 남정의 41.2%가 군역을 부담했다. 外案付에서는 경상감영·좌병영·좌수영·동래진·본읍 등에 속하는 수성군관 등이 있었는데, 18세기 중반에 비해 크게 액수가 늘어났다. 기장현에서도 군액의 증대는 외안부의 증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군역법 이후 각 지방관청에서는 경쟁적으로 軍保의 수를 증액함으로써 재정 수입원을 늘려갔다. 19세기의 기장현에서는 특히 좌수영·동래진·본읍의 군액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조선후기의 군역은 현물세화하였다. 군역민들은 대부분 군포 혹은 군전의 형태로 군역을 부담하였다. 고역으로 알려진 수군에서는 不立番의 추세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기장현

의 군역민들은 군역세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 피역·도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군역제 운영에서도 심각한 軍多民少 양상이 전개되었다. 水操와 陸操와 같은 정례적인 군사훈련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대동법 시행 이후 기장현의 공물·진상도 대체로 결세화된 대동세로 대체될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 존속하였던 土貢의 공물 및 진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저치미가 설정되었다. 대동법이 시행되기 이전 기장현의 진상물은 진상군 등의 신역을 부과하여 전담시키는 방식과 民結에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군현민에게 보편적으로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조달하였다. 대구·청어 등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기장현의 특산물은 대동법 이후에도 여전히 토공의 형식으로 현물납의 대상이 된 채 남아 있었다. 상납하는 토공이나 감영·병영·수영의 別付定에서는 시장 가격을 무시한 勒買의 여지가 많았다. 기장현과 같은 해읍 민호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기 마련이었다.

18세기 후반 이후 기장현에서도 환곡은 점차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었다. 기장현의 환곡 운영에서도 환총은 18세기 후반 이후 크게 증대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환곡의 虛簿化는 더욱 촉진되었다. 기장현의 환부는 문란해졌고, 서리의 농간은 계속되었으며, 상품화폐경제에 편승한 새로운 수탈 방식인 錢還 등이 적용되었다.

조선후기 기장현의 재정 수입원 가운데 잡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 18세기 말엽 기장현의 잡역세는 民戶收捧하는 戶斂의 방식과 民結收捧하는 결렴의 방식으로 수취되었다.

18세기 말엽 기장의 잡역세는 다른 군현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것이다. 잡역세로 지정하여 결당 8두씩을 나누어 배정하는 것 말고도, 散結縮米 등 명목으로 거두는 結斂, 왜선이 표류하여 올 때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호렴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전선을 고칠 때마다 드는 많은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잡역세를 거두어야 했다.

기장현 백성들이 부담하던 잡역세 가운데 특히 무거운 것은 전선 개조에 관한 역이었다. 전선을 한 번 고칠 때에는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기장현에서는 울산의 하미면을 환속시켜 달라고 청하게 된다. 전선역을 부담할 수 있게끔 면의 할급 조치를 통한 읍세의 보강이 이루어졌다.

조선후기 기장현의 삼정 운영에서도 오랫동안 양전이 시행되지 못한 가운데 전정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었다. 신분적 지배질서가 동요하고,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며 상품 화폐가 성장하는 가운데 부역노동의 물납세 전환은 더욱 촉진되었다. 군역을 비롯한 신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부역노동은 물납세화하고, 주로 전결세화하였다. 세역의 토지집중화 현상이 전개되었다. 이는 잡역세가 결렴하는 세목이 늘어난 데서 알 수 있다.

## 2) 무역

첫째, 부산지역의 특징인 무역 전반에 대한 연구이다.<sup>31)</sup> 부산항의 무역사는 대일 무역사이며 굴욕적인 것이었다. 부산 무역을 부산항의 변화 추이 속에서 시기적으로 살폈는데, 조

31) 박인석, 「부산무역고」 『항도부산』 2,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3.

선시대의 무역과 부산항과 조선의 무역정책과 부산항, 삼포의 개항, 왜관과 공사무역, 무역품, 삼포의 왜란, 기유약조를 다루고 있다.

둘째, 17~18세기 대일무역에서 公作米 문제를 다루었다.<sup>32)</sup> 공작미제의 성립, 下納米의 책정, 공작미 逋欠의 주도층과 手標米의 성행과 『手標米防禁節目』을 분석하였다.

공무역은 조선 조정과 대마번 사이의 공적 거래로서, 정품과 定額이 정해져 있는 무역이었다. 공무역 수입품은 일정한 비율로 환산된 값에 따라 목면이나 쌀로 바꾸어 주었다. 처음에는 목면이 지급되었으나, 대마번의 요청에 따라 목면의 일부를 쌀로 바꾸어 주게 되었다. 이 쌀이 곧 貢作米이다. 공무역에서 공작미제가 정식으로 실시된 것은 1651년부터였다.

조선에서 지급받던 목면의 질이 떨어지고 또한 일본 국내 목면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대마번으로서는 공목에 의한 결제가 유리하지 않았으며, 특히 대마도는 경지면적이 부족하여 쌀의 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에 조선쌀을 수입하는 공작미제가 실시되었다. 대마번의 절실한 요청에 따라 1651년(효종 2)부터 공목 300(15000필)분에 한하여 1정=12두로 환산하여 연 12,000석을 수출하였다. 그러다가 1660년(현종 1)부터는 100동을 증가시켜 400종분 16000석을 수출하였다.

공작미제는 조약에 체결된 정식 규정이 아니고, 5년 기한의 한시적인 조치였다. 따라서 공작미 지급기한이 끝나 갈 때마다 대마번은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조선은 특별한 은혜를 베푼다는 입장에서 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대일 공무역

32) 김동철, 「17·18세기 대일 공무역에서의 공작미 문제」 『항도부산』 10, 부산 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3.

에서의 공작미제의 성립과 전개양상은 경제적 시혜를 줌으로써 外夷를 복속시켜 대외적인 평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기미정책의 일환이었다.

공작미 납부는 처음에는 경상도 동부지역의 17읍에 부과되었다. 동래 경주 대구 등 17읍을 下納邑, 여기에서 징수하는 쌀을 下納米라고 한다. 경상도, 즉 하도에서 서울로 상납하지 않고 동래로 납부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경상도 71개 군현 중 절반 이상이 하납미 납부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공작미제 실시에 따라 대마변은 생명선과 같은 쌀을 수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1필=12두로 공목의 교환비율을 인상시켜 받음으로써 종전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납읍 농민은 하납미분에 한해서는 납세부담이 종전보다 2.4배 증가하였다. 하납미가 책정되어 대마변에 지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逋欠이 전개되었다. 하납미 징수의 모순은 1862년 농민항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납읍에서 징수된 공작미는 부산진의 釜倉으로 운송되어 公作米庫에 보관되었다가, 공무역 수입품에 대한 대금결제 때 왜관으로 반입되었다. 공무역 대금은 수입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훈도 별차가 연 1회 교체될 때 지급하였다. 공작미고에서 공작미를 입고나 출고할 때에는 동래부의 裨將과 군관 및 부산첨사가 책임을 맡았다.

부창의 공작미고에서 출고된 공작미는 運米船에 실어 왜관으로 운송되었다. 운미 담당의 책임은 감독관인 運米監官이 맡고 있었다. 운미감관은 4명으로 구성되면서 매년 교대되었다. 공작미는 규정된 액수와 질에 따라 왜관에 순조롭게 운송되지 않았다. 하납읍 부창 공작미가 왜관으로 운송되는 과정

에서 다양한 형태의 포함이 이루어져서 미납액이 증가하였다. 공작미 포함은 경상감사, 하남읍 수령과 이서층, 동래부의 수령, 군관, 이서층, 운미감관 및 왜학훈도와 별차 등 다양한 주도층의 상호 유착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운미감관이었다. 운미감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동래부 상급 무임과 향리로서 차정되었다. 이서층의 포함은 부창의 각종 창고를 담당하는 色吏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公作米色吏를 겸하고 있던 書啓色吏가 가장 대표적 존재였다. 조선후기의 향리세계는 吏房이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방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수령의 막료인 裨將이 釜倉 입고의 감독을 맡고 있었다. 수령의 포함은 동래부사와 하남읍 수령과의 유착 속에서 동래부사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동래부사는 군관, 이서층, 운미감관, 훈도별차, 상고뿐만 아니라 경상감사와 유착하여 포함을 주도하였다.

또한 포함의 주도층들은 공작미 포함뿐만 아니라 잠상 활동 등 상업활동도 하였다. 공작미의 포함은 환곡의 포함과 마찬가지로 당시 발달하고 있던 곡물시장과 연결되면서 전개되었다. 곡가의 가격차를 이용한 移貿를 이용하여 作錢하고, 또 이것으로 立本取殖의 고리대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포함의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手標米이다. 수표미는 공무역 대금 결제로 지급되는 공작미를 만기일 전에 지급할 경우, 미리 공작미를 포함하여 이를 정액보다 싼 값으로 지급하면서 정액의 수표를 받아두었다가 공작미를 결제할 때 차액을 남기는 것이다. 수표미 매입은 貢價의 지급 年條인 貢物의 연조를 매입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었다. 이것

은 대일 공무역 대금결제에 수입품을 받는 즉시 공작미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훈도 별차가 교체될 때 지급되는 방법에 편승한 공작미 포함의 한 유형이다.

수표미 매매는 훈도 별차, 동래부사, 군관, 이서층, 비장, 운미감관, 상고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공작미 지급 결재권을 가지고 있던 훈도 별차가 수표미 매매를 주도하였다. 수표미 매매의 이익이 증대함에 따라 동래부가에 이에 적극 개입하였다. 따라서 종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훈도 별차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1782년에 마련된 『手標米防禁節目』은 수표미 매매의 독점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었다. 공작미 포함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1782년 『手標米防禁節目』 등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공작미 포함은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편승하여 19세기 농민항쟁의 중요한 배경의 하나가 될 정도로 더욱 구조적으로 확대되었다.

조선후기 대일무역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전되어 무역장소, 무역주체, 거래물품, 무역방법 등 다각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17세기 이후는 명을 중심으로 한 책봉체제가 붕괴되고, 동아시아 무역이 새롭게 편성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 대외무역상인의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대외 무역의 성격을 밝힐 수 있다.

이에 17세기부터 18세기 중엽까지 대일무역상인이었던 일본어역관의 대일무역을 고찰하였다.<sup>33)</sup> 중개무역에서 대일무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가운데서 일본어 역관의 역할을 주목하였다. 당시 일본어 역관은 대일무역상인이었는데, 그들은 외교·무역 등 전반적인 대일업무를 담당하였다.

33) 양홍숙, 「17~18세기 역관의 대일무역」 『지역과 역사』 5,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9.

역관의 대일무역 배경으로 17세기 이후 중개무역의 전개, 역관의 직임과 무역권의 강화를 살피고, 대일무역상으로서의 성장에서는 군수물품의 수입, 被執物品 수입, 潛商 활동을 살폈다. 역관의 축재와 재투자 활동에서는 축재의 현황과 재투자 활동을 살폈다.

일본어 역관의 무역활동은 국가의 긴요한 군수품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하여 개시무역에 참가하여 중국 수입품인 白絲와 조선산 인삼을 被執을 통하여 수출하였다. 일본어 역관이 개시무역에 참가하는 것은 공인된 무역활동이었다. 군수품 마련과 개시무역 참가를 빌미로 일본어 역관에게는 밀무역의 기회도 많았다. 일반 상인과 왜관 주변의 민들과 결탁하는 경우, 역관 내부에서 상호 묵인 하에 행한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밀무역도 있었다.

역관은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역관의 무역 이익은 축적된 부를 국내 상업자본에 재투자함으로써 자본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역관 무역활동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넷째, 17세기의 대일교역의 형태를 밀무역과 통제책을 중심으로 살핀 연구이다.<sup>34)</sup> 17세기 조일무역은 進上 및 回賜와 求請, 공무역, 사무역의 세 가지 형태였다. 사무역은 일본 측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조선에서는 開市라고 하였다. 그런데 대일 개시무역은 동래상인들이 담당하였다. 그들은 관의 허락을 받고, 商賈定額制에 의해 제한된 인원만이 독점권을 가지는 전형적인 官許特權商人이었다. 밀무역은 동래왜관에서 행해지는 합법적인 무역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이

34) 김동철, 「17세기 일본과의 교역·교역품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61, 1995.

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밀무역은 潛商, 私商, 潛賣라고 나타난다. 밀무역의 수출입품도 공무역의 물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대일 수출품은 인삼과 쌀이었다. 인삼은 寬文 연간부터 이루어진 의약사상의 보급 이후 늘어났지만, 被執蔘은 1/10의 세금을 내고, 집산지가 평안도 지방이므로 평안도-개성-서울-동래상인의 유통구조 속에서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쌀은 대마도의 경지면적이 부족하여 밀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인과 역관, 향리, 군관의 결탁에 의해 조직적으로 동래 현지에서 조달되었다. 밀무역의 수출품은 유황이나 무기류가 중심이었다.

17~19세기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동래왜관 중심의 무역이었다. 개시무역은 사무역으로 商賈, 來商 등으로 나타나는 동래상인이 중심이었다. 개시무역의 범주는 開市, 朝市, 5일 개시, 別開市로 나눌 수 있다.

개시무역의 기본적인 틀은 중국의 견직물과 白絲를 수입하고, 조선의 인삼을 수출하는 교환체제의 중개무역과 인삼과 일본의 은을 교환하는 체제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다.<sup>35)</sup> 이중구조는 1730~40년대를 기점으로 단일구조로 바뀌었다. 조선의 우피 수출과 일본의 구리 수입으로 바뀌었다. 중국과 일본의 중개무역은 변화하여 직거래 하면서 중개무역은 쇠퇴하였다.

왜관의 무역은 동래의 5일장과 연관이 있었다. 경상도지역의 유통구조가 왜관의 무역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왜관무역상

35) 김동철, 「조선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 『민족문화』 21, 민족문화추진회 1998.

인은 국내상업과도 연계되었다. 대표적으로 마른 해삼은 통영·거제·남해에서 생산되어 왜관에서 거래되었다. 왜관의 생활·문화·풍속이 국내에 영향을 주었다. 동래지역 상인의 변화는 개시무역상인의 시기와 구성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종가문서와 조선 측의 도중상고를 분석해 보면, 무임직과 향리직을 역임한 자들이었다.

다섯째, 19세기 牛皮貿易의 실패를 국내 우피 무역의 유통 구조와 관련하여 파악하면서 동래왜관에서 대일 우피무역을 담당하던 동래상인의 실체, 특히 都中을 형성하고 있던 동중상고의 구체적인 실상을 통해 동래상인의 성격을 규명하였다.<sup>36)</sup>

1609년 기유약조 체결 이후 재개된 조일무역은 공무역, 사무역, 밀무역의 세 형태가 주류였다. 그런데 인삼 생산의 부진, 중구과 일본의 직거래로 인한 생사 유통의 부진, 1752~53년 이후 은 수입의 단절로 조일무역이 쇠퇴해감에 따라 사무역 구조로 바뀌어 갔다. 이에 19세기 사무역에서는 우피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한편 19세기 동래상인의 삶은 우피 수출과 동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한편 우피는 청에도 수출되었다. 대청무역에는 정액 제한이 없었으므로 잠상들에 의해 방대한 양이 수출되었다. 19세기 우피는 동래왜관의 사무역을 통해 일본에 11,000~25,000매, 책문후시를 통해 청에 20,000매 이상이 수출되었다. 이는 합법적인 무역 액수이고, 잠상에 의한 수치까지 합치면 훨씬 상회하였다. 우피의 공급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도살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潛屠에 의해서 우피가 공급되었다. 아울러

36) 김동철, 「19세기 우피무역과 동래상인」 『한국문화연구』 6,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양조업의 발달은 육류 소비를 증가시켰다. 불법적인 도살이 성행하자 국가에서는 牛禁政策을 시행하였지만, 대일과 대청 무역에서 우피 수출의 증대는 잠도의 성행을 촉진하였다.

조선후기 쇄국기 판매의 독점은 懸房이 가지고 있었다. 현방의 전복들은 우피로서 昌廬이란 시전을 운영하였다. 그러자 창전 이외의 우피판매는 私賣로 禁亂의 대상이 되었다. 사매가 성행하자 난전행위가 심해졌다. 19세기 이후 대일·대청 우피 수출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도에 의한 우피 잠매가 성행하였다. 당시 우피 판매를 둘러싸고 창전과 대립하였던 상인은 삼남·개성·동래·의주 등의 사상도고였다. 이들은 국내 유통구조를 독점하였다.

동래왜관에서 대일 사무역에 종사하던 동래상인은 관허특허상인이었다. 이들은 사상의 밀무역을 막기 위해 1813년 우피 각 수출과 동 수입을 중심으로 한 왜관무역은 상고도중만 담당하고, 사상은 금지하는 「慶尙道東萊府商賈等掬節目」을 마련하였다. 그러자 동래사인 내부에서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공상과 사상을 막론하고 왜관에 우피를 入執하는 자에게는 우피 한 장에 1전씩을 받아 도중의 공용에 보충하도록 하는 추절목이 마련되었다.

19세기 동래왜관의 대일 사무역을 독점한 도중상고는 동래 지역 최고급 무임인 중군을 비롯한 각 무청의 수임직 무임들이 겸하고 있었다. 아울러 향리층도 포함되었다. 이들 도중상고는 관허특허상인이었다. 개항 이후에도 우피는 대일 사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7세기 대일 교역의 실태를 밀무역과 통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sup>37)</sup> 수출품과 수입품, 倭債(路浮稅), 밀무역 통제

책을 주목하였다. 17세기 밀무역 통제책은 극형주의에 의한 통제와 개시무역의 강화가 기본이었다. 따라서 밀무역 통제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各房散入의 금지, 왜채(노부세)의 금지, 상고정액제의 실시 등을 검토하여 17세기 조일무역의 성격을 구명하였다.

밀무역은 동래왜관에서 행해지는 합법적인 무역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밖에 통신사행이나 문위행 등에 편승하여 발생하였다. 일본 측의 경우에는 밀수선(拔船)을 타고 와서 밀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양국사이의 밀무역에 대한 규제방침에 따라 밀무역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었다. 밀무역은 조선측 사료에는 흔히 潛商, 私商, 潛賣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밀무역을 잠상무역으로 표현하는 경향도 있다. 밀무역의 성격은 공무역, 개시무역과 관련된 조일무역 전체의 틀 속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밀무역의 수출입품은 공무역, 개시무역 물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인삼, 쌀의 수출과 무기, 유황의 수입이 중요한 물품이었다.

인삼이 주요 수출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7세기 중엽 이후 일본의 수요 급증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수요의 급증은 寬文 연간(1661~1672)부터 이루어진 의약사상의 보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일본의 의약사상 보급에는 조선 의학서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공무역이나 개시무역을 통해 수출되는 인삼은 양이 제한되어 있었다. 被執蔘은 1/10의 세금을 내어야만 했다. 상인들은 탈세가 용이하며, 양에 구애받지 않

37) 김동철, 「17세기 일본과의 교역·교역품에 관한 연구-밀무역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61, 국사편찬위원회, 1995.

아 이익이 많았던 밀무역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삼 밀무역은 상인과 역관의 결탁에 의해 더욱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쌀 밀무역은 동래 현지조달이 용이하므로, 대개는 동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인삼의 최대 산지는 평안도 경계이므로, 평안도 상인-개성 상인-서울 상인-동래 상인의 연계 속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밀무역 자본에는 상인들 자신의 자본뿐만 아니라 倭債, 즉 노부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노부세는 일본인이 밀무역을 전제로 조선 밀무역자에게 주는 자본의 대부이다. 노부세의 대부 액수가 많아지고, 또 미상환 액수가 늘어날수록 대마번 재정은 악화되었다. 대마번은 徵債差倭를 파견하여 부채 상황을 독촉하였다. 노부세 상황을 둘러싼 갈등은 당시의 중요한 현안 중 중요한 현안이었다. 17세기 중반 이후의 미상환 액수는 대략 10여 만냥 정도였다. 노부세는 동래지역 사람만 아니라, 개성·서울 사람들과 상호 연관되어 채무관계를 맺고 있었다.

17세기 후반에 밀무역을 방지하고 노부세의 증가를 막기 위해, 개시무역 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것은 개시무역을 담당하는 동래상인의 수를 제한하는 상고정액제의 실시였다. 1678년 초량왜관 체제가 시작되면서 상고정액제가 처음 실시되었다. 정원은 20명인데, 동래상고로 선정하였다. 상고정액제 폐지 후 상고 수가 늘어나 1691년에는 43명이었다. 상고 수가 늘어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역관이나 권력기관이 노비를 差人으로 삼아서 개시무역에 종사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691년에 동래상고정액절목을 마련하여 개시무역 체계를 강화하였다. 상고정액제는 이

절목에 의해 체계화 되었는데, 이때의 정원은 30명이었다. 정액 내의 상고에게는 왜관 출입을 허용하는 허가증인 勿禁牌가 지급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受牌商賈라고도 불렀다. 수패 상고들은 商賈案에 등록되었다. 수패상고들은 都中이란 조직체를 형성하였으며, 도중에 가입한 동래상고를 도중상고라고 불렀다.

상고정액제로 인한 개시무역 독점권의 강화로 모순이 야기되자, 1702년에 상고정액제를 폐지하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개시무역의 독점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18세기 이후 개시무역이 점차 쇠퇴하여 가면서 상고정액제는 변하여 갔다. 1691년에 30명이었던 정원이 그 후 20명-15명-10명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개시무역의 쇠퇴에 따른 조일무역의 분석이 동래상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일곱째, 『東萊府商賈案』과 『東萊武任先生案』을 비교 분석하여 19세기 후반 동래상인의 성격을 분석하였다.<sup>38)</sup> 주체적으로 『동래부상고안』의 구성과 塵人案 및 전인방방절목, 『동래부상고안』 수록 상인의 동래무임직과 향리직의 경력, 동래상인과 동래기영회를 분석하였다. 동래상인에 대한 일차적 자료를 발굴하여 동래상인의 성격을 규명한 연구로 주목된다.

『동래부상고안』은 1860~1870년대에 작성된 일곱 책이 한 권으로 합철된 필사본이다. 이 안은 동래부에서 상행위를 허락해 준 동래상인 명단이지만, 서로 상이한 유형의 商人案이 합철된 것이다. 『동래부상고안』은 크게는 『加士里商人

38) 김동철, 「《동래부상고안》을 통해서 본 19세기 후반의 동래상인」 『한일관계사연구』 창간호, 한일관계사학회, 1993.

案』과 『商人塵人案』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사리상인안』은 寒天을 만드는 주원료인 우뭇가사리의 매매를 허가해 준 상인 명단이다. 『동래부상고안』에 수록된 세 책의 『加土里商人案』은 우뭇가사리 매매의 독점을 허락해 주는 대신, 이들로부터 일정액의 商稅를 받기 위해서 작성한 상인 명단이다. 세 책에 수록된 가사리상고의 수는 모두 79명이다. 연대가 가장 빠른 1866년 안에 수록된 41명 가운데 1875 안에도 수록된 사람은 15명이다.

『동래부상고안』의 일곱 책 중 네 책은 『商人塵人案』이다. 『상인전인안』에 수록된 상인을 보면, 상고의 수는 증가하여 1871년의 9명에서 1875년의 2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塵人의 수는 8명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 1871년 상고안에 수록된 9명의 상고 중 1874년 상고안에 계속 수록된 자는 5명이며, 1874년 상고안에 수록된 27명은 전원 1875년 상고안에 수록되어 있다. 전인의 경우도 1874년 전인안에 수록된 8명 중 6명이 1875년 전인안에 수록되어 있다. 연대차가 1871~1875년으로 4년밖에 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이 네 안에 한정시켜 본다면 상고·전인의 상업활동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며 상업활동에서의 독점성을 반영하고 있다.

『동래부상고안』과 『동래무임선생안』을 비교해 보면, 79명의 가사리상고 중 무임지기나 향리직 경력을 가진 자는 5명뿐이다. 또 그들이 역임한 무임직에는 각 무칭의 首任職은 없다. 이에 비해 무임직 경력은 다양하다. 무임직 경력에서 본다면, 가사리상고는 상고 전인보다 격이 낮은 상인이며, 전인도 상고보다는 격이 낮은 상인이다. 따라서 동래상인 내에

서도 대일 무역 독점권은 중군 등 수임직 무임으로 구성된 상중도고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래 상인들 중에는 武廳과 作廳의 퇴임자로 구성된 동래 기영회 회원으로 가입한 자도 있었다. 이들은 동래지역의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한 상인도 있었다. 동래 지역의 중군 등 수임직 무임들은 그들의 직임이 보장하는 특권을 담보로 하여 대일무역 독점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여덟째, 조선후기의 대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被執蓼의 양과 가격의 통제를 분석하고,<sup>39)</sup> 거래형태로 선대제적인 방법과 외상거래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개시무역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피집삼은 일본에 의학사상이 보급되면서 수요가 늘자 많은 양의 인삼을요구했으나 1/10의 세금을 부담시켰다. 이에 밀무역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상인과 역관이 결탁하였다. 또 일본인들은 인삼의 확보를 위해 선대제적인 방법과 외상거래를 동원하였다.

#### IV. 앞으로의 과제

위에서 살펴본 조선후기 부산지역의 정치사와 경제사의 연구현황을 토대로 앞으로 이 두 분야의 연구 과제를 나름대로 제시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부산지역사 연구에서 조선후기 연구가 보다 더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39) 김동철, 「조선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피집삼」 『한국민족문화』 1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9.

먼저 연구 분야의 일반화와 특수화이다. 부산지역의 조선후기사를 국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는 일반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사 분야의 경우는 정치세력과 정치운영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에서 확인된 향반의 실체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반 가문에 대한 개별 연구가 필요하다.

정치운영과 제도사라는 측면에서는 전근대사회에서 중앙행정의 집행과 지방에 대한 시행이 부산지역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행정과 국방이라는 측면에서 부산지역의 군사, 무역이라는 측면에서 부산지역이 강조된 측면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정치이념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도 향교와 서원, 제단과 정려 등의 보급이 갖는 내용과 의미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행정을 일반 행정과 특수 행정으로 구분했을 때 부산지역의 특수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자료의 발굴과 이를 통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서 지방행정의 경우 부사나 현령의 업무, 활동, 행적을 살핌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관계 및 관료와 민의 관계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해당 관료의 자료를 발굴함으로써 지역 행정에 대한 구체적 실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지역의 수령을 역임한 개별인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리학의 정착과 보급을 살표볼 수 있을 것이기에 때문이다.

둘째, 경제사 분야에서는 전근대사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속에서 부산의 실정을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전체에서 부산지역의 토지소유관계와 소유형태의 변화 실상을 파악하고, 대외관계에서 부산지역이 차지한 위상과 무역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세제도의 연구를 통해서 부산지역과 중앙과의 관계를 살피고, 지역적 특징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또한 관련 자료를 끊임 없이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특정 연구 분야의 심층화 작업이다. 부산지역의 조선후기사에서 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우선 왜관과 관련된 부산지역민의 다양한 대일 활동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소통사뿐만 아니라 왜관 내부의 다른 여러 직책도 연구하는 시각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 왜관 무역 형태와 물품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대일무역의 실상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론과 자료의 발굴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이 분야 연구들이 이룩한 업적을 감안할 때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는 곧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자 한 국사 연구의 내실화를 다져줄 것이다. 그것은 지역화이자 전국화이기도 할 것이다. 연구자들의 도전과 정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어업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물품이나 생산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부산지역의 산업이 갖는 조선후기의 실상과 특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방의 측면에서도 조선후기에 부산지역에서 강화된 제도적 변화와 관방시설의 확충이 갖는 의미를 국가전체의 흐름속에서 규정짓고 개별 성곽이나 제도변화를 살펴서 조선후기 부산의 군사적 측면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폭의 확대와 연구 주제의 다양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산지역사 연구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부산지역 연구자는 몇몇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심화되고 전문화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의 지속성이나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전되어 폭넓은 연구가 요망된다.